

‘또’ 광주 중학교 입학배정 사전 노출

광주지역 중학교 신입생 입학배정 결과가 사전에 노출돼 말이 되고 있다.

2015학년도 신입생 배정 당일 홈페이지가 과부하로 다운된 데 이어 4년 만에 또다시 전산사고가 발생해 교육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주시 교육청과 일부 학부모들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0분경부터 2019학년도 광주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2018학년도 중학교 입학배정 발표는 제목으로 됐지만 실제 내용은 2019학년도 배정 결과였고 해당

‘2018년’ 제목이었지만 2019학년도 배정 결과

자료 공유돼 퍼지며 행정 신뢰성 타격 불가피

자료는 3시간 가장 이렇다할 보안장치 없이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시 교육청은 당초 31일 오전 11시 중학교 배정대상자 1만4188명(동부 4318, 서부 9870)에 대한 배정 추첨 결과를 시 교육청과 동·서부 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관련 자료는 일부 학부모들 사이

에 공유돼 삼시간에 퍼지면서 행정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발표일을 하루 앞두고 전산 장애 여부 등을 체크하기 위해 일종의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관련 데이터를 탑재한다는 게 그만 외부로 노출된 것 같다”며 “노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 교육청은 지난 2015년 2월

일반계고등학교와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발표 당일 인터넷 홈페이지가 2시간 동안 다운돼 원성을 산 바 있다.

당시 시 교육청은 오전 8시부터 47개 일반계 고교에 배정된 신입생 1만5896명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나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가 마비돼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다.

당시 사고는 일방교와 함께 1만 6105명에 이르는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동시에 발표한다던 중등교사 인용시험 합격자 명단까지 공표되면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빚어졌다.

조인호 기자

3년 간 1009명 성형수술...알고보니 간호조무사

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 1009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도운 병원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간호조무사 A(70)씨, 성형외과 원장 B(5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중랑구 중화동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쌍꺼풀, 눈주름, 페이스리프팅 등의 의료행위를 무면허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해당 기간 A씨의 의료행위를 자신이 한 것처럼 꾸미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병원 관계자들조차 간호조무사 A씨가 진짜 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치밀하게 비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사 행세를 하며 성형외과 주변 미용실, 피부관리소 등을 통해 환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마을방송 입찰 미끼’ 1억여원 뇌물 공무원 구속

청주지검은 마을방송 통신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청진 혐의(뇌물)로 충북 영동군청 6급 팀장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영동군 마을방송 현대화 사업 입찰을 미끼로 통신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아 청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1일 같은 수법으로 1억여원을 받아 청진 충북 모 학부묘원 합회장 B씨를 구속한 검찰은 영동군청으로 수사를 확대, 같은 달 29일 군청 입수·수색을 통해 A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B씨와는 다른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외 또다른 군청 공무원이 입찰 비리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입찰에 관여한 학부묘원장 B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각장애 또래 집단폭행 무서운 10대 3명 검거

자신들을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가 있는 또래를 집단폭행한 10대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18)군과 B(18)양 C(16)양 등 10대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중구의 한 공원 앞과 북구의 한 교량 밑 등지에서 D(18)양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각장애 6급인 D양의 머리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눈을 때리는 등 수차례 구타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는 B양의 옷을 벗겨 속옷 차림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A군 등은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28일 탈출한 B양은 29일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지병으로 쓰러진 아내 방치 사망...30대 남편 구속

지병으로 자택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정종화 부장검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 5분에 자택에서 쓰러진 아내 B(44)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119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B씨는 평소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쓰러진 지 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2시에 결국 숨졌다.

또 A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에 그대로 두고 회사에 출퇴근 한 뒤, 뒤늦게 처가 식구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뉴스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규탄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파괴하고 자동차산업을 위기로 내모는 광주형일자리 협약 체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 앞두고 노동계 반발 잇따라

광주시청 앞서 잇단 기자회견·결의대회 개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그룹이 31일 현대차 광주 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갖는 가운데 노동계가 사업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차 지부는 이날 협약식이 열리는 광주시청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과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광주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광주시는

노동기본권과 헌법에 무시한 채 재벌과의 뒷거래로 광주형 일자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광주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재벌특혜이며, 정경유착이자 청산해야 할 노동적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시장에 대한 부자가

아닌 이미 포화상태인 경차를 생산하는 것으로 미래가 없다면서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현재 상황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으로 정부가 개입, 추진한 사업이 제대로 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도 무시하는 것이 노동존중이냐 노사상생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부와 시는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재벌천국의 신호탄이 될 대국민 사기극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이용규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